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7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혹시 나도 '준내부자'?...미공개 정보이용 '주의'
- 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영업도 강구"
- 시민단체 "대통령 직속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해야"
- 롯데닷컴,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 국정기획위 "본인 관여된 공익신고자 형벌 감면"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발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투명한 경영으로 믿을 수 있는 aT

3. 청렴 위반 사례

- 공식적 행사 기자초청
- 설문조사에 따른 기념품 지급

4. 지식마당

-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혹시 나도 '준내부자'?...미공개 정보이용 '주의'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위반자 유형별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내부자	78	59	60	49	43	289
대주주	9	5	4	10	10	38
임직원	56	46	44	36	28	210
기타	13	8	12	3	5	41
준내부자	16	10	14	17	36	93
1차정보수령자(주)	46 (6)	16 (1)	37 (6)	29 (5)	56 (32)	184 (50)
계	140	85	111	95	135	566

주) 괄호 안은 1차 정보수령자 중 내부자가 아닌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의 합계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는 통상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돼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3/0200000000AKR20170623149400008.HTML?input=1195m>

2. 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영업도 강구"

정부가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등 대규모 점포 축소를 단행하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최근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의 경영 전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금융위는 "65세 이상 고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기존 금융거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95351002.HTML?input=1195m>

최근 동향 및 소식

3. 시민단체 "대통령 직속 국가반부 패전담기구 설치해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국가반부 패전담기구를 재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반부패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정부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헌,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반부패 비전과 추진로드맵도 제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4_0000031098&clD=10201&pID=10200

4. 롯데닷컴,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롯데닷컴(대표이사 김형준)은 지난 3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유통 업계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식 제정한 조직의 반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이다. 윤리경영, 청렴활동, 법규준수, 내부통제, 뇌물수수방지활동 등 반부패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29.99002151314>

5. 국정기획위 "본인 관여된 공익신고자 형벌 감면"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 침해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이 관여된 사안을 내부 고발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로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 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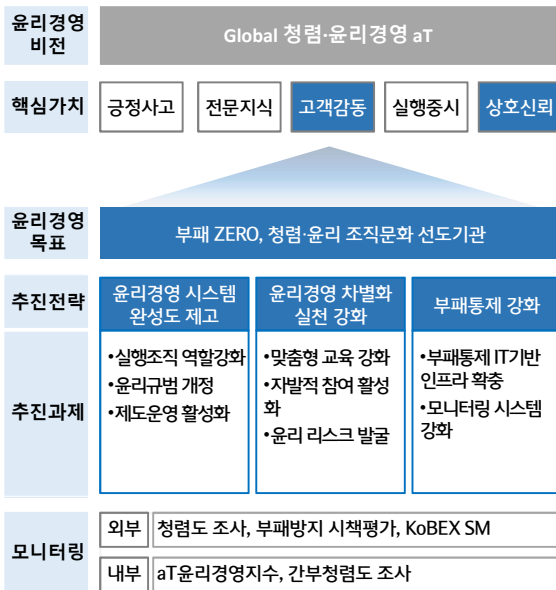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29.99002151314>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투명한 경영으로 믿을 수 있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Global 청렴·윤리기업 aT’를 비전으로 삼고, ‘부패 Zero! 청렴윤리 조직문화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추진체계 강화, 맞춤형 윤리교육, 반부패 모니터링 내실화,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견고히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윤리현장 및 윤리강령을 개정했으며, 자발적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1. aT의 윤리·청렴 DNA 내재화

智(지)·好(호)·樂(락) 교육전략

‘지호락(智好樂)’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공사는 이 지호락 전략에 착안하여 다

양한 청렴·윤리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입사부터 임원까지 평생 청렴·윤리 학습제도를 운영하여 반부패 윤리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다. 한편 공사의 청렴문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렴리더 양성을 위해 차장급 인원으로 구성된 청렴리더 워크숍, 청렴윤리인증제를 실시하여 청렴리더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이 각 부서에서 청렴 멘토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급직원과의 윤리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All Together 윤리 서약식

농식품 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연간 사업계획에 동반성장 의지를 반하고, 공사의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까지도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all Together 윤리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공사 고객사 CEO 및 임직원을 초청하여 윤리특강 및 윤리 선언문 공동서명을 통해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2. aT 윤리청렴주간 운영

공사는 11월 11일을 ‘윤리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간 윤리청렴주간을 운영하며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CEO가 직접 공사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윤리백설기를 배포하며 공사의 윤리지를

윤리경영 실천 사례

홍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객참여 퀴즈이벤트, 도전! 윤리골든벨, 윤리전문가 특강, 윤리딜레마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윤리딜레마 공감 사례 공모전’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딜레마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윤리경영을 의무적이고 딱딱한 업무라고 인식하는 임직원을 위해 윤리메시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매월 다른 주제를 전달함으로써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를 직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월 ‘aT의 품격’이라는 30초 내외의 짧은 메시지 상을 제작하여 공사 임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에티켓에 대해 다루었고, 이를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 게시하여 매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3. 농식품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aT

농어촌에 전하는 공사의 사랑 나눔

공사는 농식품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농식품 관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농식품 분야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10개소를 선정하여 무료 경영컨설팅과 멘토링, 사이버거래소 입점을 통한 판로확대, 수출지원, 교육 등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서비스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여성을 ‘다문화 사랑나누미(보육도우미)’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 다문화 여성들이 편안하게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말에 서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오디오북 9편을 제작·보급하고, 다문화가족 교육교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친정·외가 방문 지원’ 행사를 개최하여 자주 친정에 가지 못하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공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직원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 ‘aT Probono(재능기부자) 봉사단’을 구성하여 임직원 총 232명이 업무지식·어학·악기·사진 등 255개의 재능을 등록하였다. 화훼공판장의 재능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꽃가게 취·창업을 지원하는데, 3개월간 총 12회 교육을 실시하여 꽃꽂이 실습, 꽃가게 운영 실무, 국내외 시장흐름 등 취업에 필요한 전략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능기부에 힘쓰고 있는데, 업무시간 종료 후, 언어재능을 가진 직원들이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반을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매주 언어교육 및 정서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쌀과 밀반찬을 지원하는 “희망 찬찬 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김장비용의 상승으로 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사회 복지시설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사례집, 2013

청렴 위반 사례

1 공식적 행사 기자초청

글로벌 기업과 지역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업 서비스 출시 행사에 기자를 초청하였다. 지자체 산하기관은 서울에 있는 중앙지 기자들을 초청하여 숙박, 교통비를 제공하였다. 지자체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획에 참여해 공동으로 주관하였지만, 행사 자체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출시행사였다.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 인정
- ②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③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④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행사의 목적 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고,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금품 등을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설문조사에 따른 기념품 지급

A 회사는 개인고객과 관공서 고객이 존재하며, 관공서 고객은 공무원이다. A 회사는 회원으로 등록된 관공서 담당자들에게만 회사 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념품 지급을 실시하였다. 기념품으로는 홍보용품 및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시사점 :

- ① 법 제8조제2항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로 규정하였으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②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공직자 등에게 설문조사에 응한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례는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 기준 상 허용 여부, 대가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지식마당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1. 개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대중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이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며,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이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43점인 반면, 르완다는 53점이다. 게다가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이면 소액의 부정부패정도는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어 상대적으로 대중의 체감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 프랑스의 RSF(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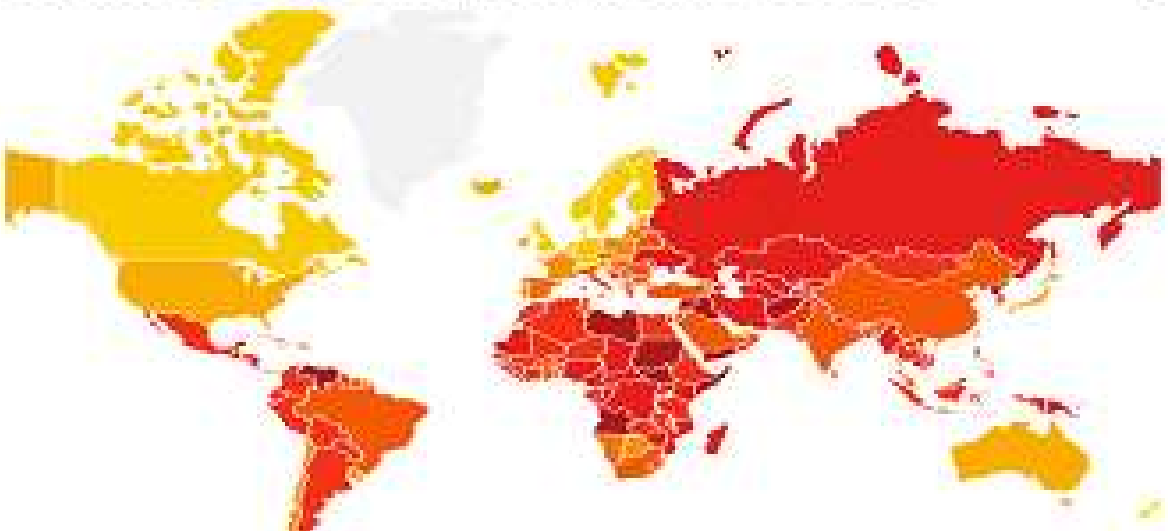
2. 부패인식지수의 특징

부패인식지수(CPI)의 주요 특징으로는 설문조사결과들 중 부패수준과 관련된 항목들만을 집계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부패정도가 낮은 경우를 높은 점수, 부패정도가 심한 경우를 낮은 점수로 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주된 정보원이 설문조사에 있으며, 포함된 대부분의 설문조사들이 주로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초점이 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 측면에 맞추어져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지수는 객관적인 실측자료가 아닌 주관적인 인식자료를 사용하므로 국가간 비교기준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 자료사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패관련 지수이며 각국 정부의 역량과 국가 경쟁력 평가에 있어 부패분야의 대안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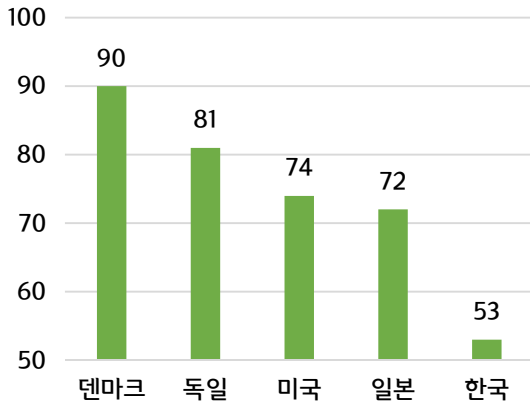
지식마당

3. 부패인식지수의 중요성

부패인식지수는 설문을 통해 사회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하는 접근법으로, 부패의 개념규정의 모호함과 측정의 제한성을 다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부패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통해서 부패를 연구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룬퀴스트와 한손 (Rundquist and Hanson 1976)은 한 정치 공동체내에서 개인, 집단에 의한 공적 행위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때 이를 부패 행위로 규정하였다. 한 사회에서 부패로 간주되는 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는 정치로 간주될 수 있고, 부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16)



부패인식지수의 산출은 사회구성원의 부패에 대한 체감의 정도를 측정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패 정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패인식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4. 부패인식지수 변화 사례

4.1.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 대한민국은 90년대 중후반에 40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부터 50점을 넘어섰지만 2008년에 56점까지 오른 이후 정체된 상황

- 국가순위 역시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있다가 부패인식지수가 급락하더니 2016년에는 19점으로 추락

4.2. 급격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한 사례

- 아이슬란드는 2005년, 2006년 각각 97, 96점으로 1위까지 했지만 2013년에는 78점으로 12위까지 추락
-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87점으로 10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69점으로 26위까지 추락
- 시리아는 2003년에 34점으로 133개국 중 66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17점에 177개국 중 168위까지 추락하였고 특히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9점이나 점수가 내려갔고 순위는 24계단이나 내려감. 시리아 내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다수 국가들의 점수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추락

4.3. 급격히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한 사례

- 우루과이는 2001년에 51점으로 91개국 중 35위를 함. 그리고 2013년에는 73점으로 19위까지 상승
- 라트비아는 1998년에 27점으로 85개국 중 71위를 함. 그리고 2013년에는 53점으로 49위까지 상승

부패;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의 균형점; 티핑포인트; Corruption; Perception of Corruption; Corruption Equilibrium; Tipping Point,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진중순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준석 외 3명

Quiz

- 다음 중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다양한 조사기관들의 부패관련 설문조사의 결과값을 단순조합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
 - ② 설문조사결과들 중 부패수준과 관련된 항목들만을 집계
 - ③ 부패정도가 낮은 경우를 높은 점수, 부패정도가 심한 경우를 낮은 점수
 - ④ 설문조사들이 주로 경제인들을 대상
- 다음 중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올바른 것은?
 - ① 90년대 중후반에 60점대에 머무름
 - ② 2005년부터 하락함
 - ③ 2008년에 40점대까지 하락함
 - ④ 2016년에 19점으로 하락
- 다음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이행 계획이 아닌 것은?
 - ① 신고자 보호 전담 조직 강화
 - ② 신고자 차별 시 혜택 제공
 - ③ 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 ④ 신고 구제 수단 적극 활용
- 다음 중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이다
 - ②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성향과 관련이 없다
 - ③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 ④ 2009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0여개의 기관의 13 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1. 답** ②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내용은 뇌물공여의 구성요건, 대상, 그리고 관할권과 범죄인인도를 포함한다.
- 2. 답** ① OECD 뇌물방지 협약의 특징은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구두, 서면 보고 등 독려 압력이다.
- 3. 답** ③ OECD는 주요 국제거래의 15% 가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 4. 답** ②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관련 행사

1. 상장사 CEO들 기업 투명성 논의 하는 조찬강연 열려

국내 증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기업 회계에 관해 논의하는 조찬강연이 21일 열렸다. 이날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계환경의 변혁에 따른 상장회사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상장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조찬강연을 열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부고발 활성화, 형사처벌 강화 등 근본 처방에 집중해야 하며 정상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처방을 달리 하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상장사들이 회계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강연을 맡은 손성규 회계학회 회장은 “회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는 기업 외적인 요인보다는 최고경영자가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의 ‘공익 제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내부 공익 제보의 필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0HA91VRVC/GK03>

2. 공익 시민단체, ‘내부 고발자’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함께회관에서 ‘공익제보자 힘! 토크콘서트’를 개최, 공익 제보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전경원 하나고 교사, 불교계 대표 인권변호사인 김형남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183>

3. 권익위, ‘2017년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공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회는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제도 및 소양 등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주제로 열리는데,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 기타 반부패·청렴정책, 역사속의 청렴인물 소개 등이 주요 소재다. 참여대상은 일반부문에 공직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공직부문은 행정·입법·사법부 소속 현직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현직 임직원 등이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18>

독자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